

# 국제정세의 변화와 한반도

---

정 종 옥

서울대 교수

---

##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추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 추이를 각국별로 요약하기 전에 먼저 일반적 특징을 지적하면 다음 몇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 특징으로서 소련과 중국 등 주변국가에서 이른바 戰後世代가 지도층의 前面에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에서는 역대 소련의 지도자들중에서 처음으로 2次大戰後에 대학을 졸업했고 스탈린 시대가 지난 다음에 정치적 立身을 시작한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다. 중국에서도 趙紫陽과 李鵬 등 實用主義路線을 표방하는 지도자들은 毛澤東 시대의 지도자들과는 달리 戰後에 정규교육을 받은 전문가 집단의 대표들로서 고르바초프와 마찬가지로 50년대의 冷戰時代를 넘겨 60년대 후반기 이후에 시작된 데탕트 시대에 들어와 비로서 정치적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이들은 모두 공산당의 獨裁나 1人의 長期執權이 초래한 수 많은 弊病을 통감하고 있다.

\* 제주대학교 통일안보연구소가 89년 6월 2일 주최한 세미나 발표 요지

둘째, 脫이데올로기의 추세와 함께 經濟要因이 最優先의 地位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데올로기의 同質性이나 歷史的 紐帶에 따라 서로 협력하고 交流하던 시대는 지났고 그 대신 經濟적 필요에 따라 대외정책이 크게 좌우되는 새로운 實利的 現實主義가 국제정치에의 흐름을 대표하고 있다. 물론 이데올로기와 전용적 유대, 그리고 地政學的 중요성이 전혀 소멸된 것은 아니지만 그보다 經濟성장을 위해 外國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불가피해졌으며 그만큼 이데올로기의 벽은 이제 낮아졌다. 이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체제경쟁에서 적어도 經濟적 측면에서 후자의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며 앞으로 국제정치에서 이데올로기나 군사적 요인보다 經濟적 요인이 점차 더 중요해질 것임을 시사한다. 한반도의 주변환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와 체제의 벽을 넘어 經濟협력과 共存을 기하려는 노력이 구체화 될 것이다.

세계 긴장완화와 和解 및 軍備統制의 重要性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80년대 초반까지 동북아 지역에서는 軍備競爭이 가속되고 서로 상이한 利害關係의 충돌이 첨예화되는 가운데 군사긴장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부터 점차 군사대결의 위험이 감소되고 긴장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70년대 말에 일어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侵政과 中·越南爭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긴장을 고조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이는 소련의 대 아시아 정책이 80년대 초반까지 매우 공세적이며 도발적이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동북아에 있어서 소련의 이와같은 정책은 극동지역에 배치된 소련군사력이 증강되고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지원이 강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항하여 81년에 취임한 레이건美國大統領이 對蘇 강경자세를 표명하고 한국과 대만등 友邦國家에 대한 支援을 강화함으로써 긴장이 더욱 심화되어 新冷戰의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85년을 고비로 긴장완화의 추세가 점차 可視化되었다. 브레즈네프의 死後 3年동안 지속되었던 후계자문제를 둘러싼 소련 국내정치에의 不安이 사라지고 고르바초프가 執權하면서 經濟성장우선정책을 표방하고 改革과 開放

의 과감한 조치들이 취해졌다. 改革조치의 핵심은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척결하고 지난날에 비교적 우선순위가 낮았던 경공업부분의 발전에 보다 많은 투자비중을 둔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권력 구조, 특히 黨과 政府의 경직된 관료조직이었기 때문에 이들 권력기구의 개혁을 의미하며 경공업부분의 우선발전은 중공업, 특히 군수공업에 대한 투자와 국방예산의 삭감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開放政策의 추진은 서방국가들과의 경제협력과 교류증진을 의미하며 이는 소련의 대 서방정책이 脫이데올로기적 경향을 띄우고 대결이나 경쟁보다 협력과 공존의 논리를 앞세우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후르시초프 때에도 소련이 平和共存을 표방한 바 있다. 그러나 50년대 당시의 平和共存이 美蘇間의 共存이라는 성격을 띠었던데 비해 고르바초프의 共存은 美國뿐만 아니라 미국의 우방국가들과의 個別的 共存을 더욱 강조하는 새로운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은 유럽에서 보다 아시아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는 歐共市와 나토와 같이 個別國家들을 하나의 統合된 集團組織으로 묶는 지역 기구나 多國籍조직이 존재하지만 아시아에서는 東南亞 國家 聯合(ASEAN)을 제외하면 이와 유사한 조직이나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의 아시아에서의 긴장완화와 화해의 제스처는 개별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雙務의 성격을 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르바초프下의 소련의 아시아 政策이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정치외교관계의 개선 또는 정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외교관계의 개선이나 정상화가 군사긴장의 완화와 화해를 先決條件으로 하고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긴장완화와 화해없는 관계개선과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소련의 관계개선노력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곳이 중국과의 관계이다. 지난 해 12월 錢其環 중국외교부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고르바초프와 세바르드나제外相과 회담함으로써 中蘇關係는 사실상 改善의 단계를 넘어 正常化의 단계에 진입한바 있다. 錢의 訪蘇에서 고르바초프와 登小平간의 中

蘇 頂上會談을 금년 5월에 개최키로 합의했었고 그 결과 양국간의 관계정상화가 실현되게 된 것이다. 30년 만에 中蘇간의 黨과 黨, 政府와 政府관계가 다시 正常을 되 찾은 것이다. 50년대의 同盟關係로 되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그럴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全無한 셈이지만 서로를 敵對視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국경지대에 군비를 증강시키던 시기는 과거의 일로 역사 속에 파묻혔고 이제 긴장완화와 共存의 관계를 넘어 友好와 經濟協力の 상대로 인식하고 交流와 접촉의 범위를 확대하는 새로운 시대가 中蘇간에 시작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中蘇관계가 개선되고 정상화되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要因들이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두나라가 모두 국내 경제발전을 위해 對外관계에서 긴장완화와 敵對關係의 제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이다. 소련은 그동안 중국이 미국과 일본에 이어지는 對蘇軍事協力 體制의 一員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 했으며 중국은 중국대로 미국과 지나친 軍事密着이 스스로의 獨立性과 自主性을 해치는 것이며 소련의 軍事的 壓力을 필요 이상으로 加重시키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을 우려 했었다. 이러한 국내적 고려와 대외적 상황에 대한 평가로 해서 中蘇 두나라는 이른바 3대 장애를 극복하고 관계정상화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소련의 중국에 대한 정책은 日蘇관계에서도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변화가 가능성을 엿보시게 하고 있다. 日蘇관계의 개선을 저해해온 가장 큰 장애물은 北方 4個 島嶼문제이다. 2次大戰의 終戰과 함께 소련의 점령 아래 놓이게 된 北海島와 캄차카列島를 잇는 이들 4個 島嶼를 반환해주어야 한다고 일본은 주장해왔고 소련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들 도서에 대한 軍事力을 증강시킴으로써 두나라 관계가 경직되었다. 소련은 86년 이전까지 이들 北方 4個 島嶼가 두나라 간의 분쟁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이 문제의 거론조차 외면하는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취임 후 자세가 다소 완화되었고 86년 1월에 일본을 방문한 세바르트나제 소련외상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으면서도 두나라 사이에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처음으로 두나라 사이에 平和條約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미해결의 北方 島嶼 문제가 적정수준에서 풀려야 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소련은 특히 일본이 시베리아 開發 계획에 참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그밖의 분야에서도 두나라 간의 경제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의 기술과 자본은 소련의 경제활성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소련은 日蘇관계개선을 통하여 일본이 미국과 정치군사적으로 密着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속셈을 갖고 있다. 따라서 소련이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에 대해 北方 島嶼 문제에 대한 부분적 양보를 단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내다볼 수 있다.

소련이 아시아에서 추구하는 기본 전략과 외교목표는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한국·대만·싱가폴·홍콩 등을 주축으로 하는 亞·太經濟圈을 시베리아 開發計劃에 연결시키면서 동시에 反核·軍縮등의 잇슈를 내걸고 아시아지역의 民族主義감령에 호소하여 平和攻勢를 전개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시키자는 것이다. 지난날 막강한 군사력이 달성하지 못했던 目標들을 이제는 平和정권을 앞세운 정치외교적 유연전략에 의해 달성하려 하고있는 것이다. 이러한 戰略과 目標은 이 지역에서 現狀維持를 전제하는 것으로서 2次大戰의 終戰과 함께 확정된 領土境界線의 固着을 의미하기도 한다. 1975년에 체결된 헬싱키協定이 바로 東西유럽의 境界線을 戰後의 軍事的 現狀에서 凍結시키자는 것이며 소련은 헬싱키協定の 정신을 아시아에서도 그대로 실현시키려 하고 있다. 1987년 7월 고르바초프가 브라디보스트크의 연설에서 제안한 아시아安保構想도 따지고 보면 헬싱키協定の 정신을 반영하고 있다.

소련의 헬싱키構想은 중국과의 국경선협정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소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남북한 관계에서도 소련이 휴전선은 準 항구적 분계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실제 소련의 言行에 비추어 보면 한반도에서 분단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단 상태가 상당히 긴 세월동안 지속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소련의 대한정책에서 가장 핵심을 이

루고 있는 것은 분단의 극복이 아니라 분단의 현실 위에 두 체제의 平和共存이며 이러한 입장은 얼마전 평양을 방문했던 세바르드나제 蘇聯外相이 북한지도자들에게 역설했던 점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일반적 특징을 각국가별로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미·소관계는 적어도 당분간 新대탕트體制가 유지될 것이다. 부시美國大統領의 對蘇 정책이 前任 레이건大統領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軍縮과 和解의 추세가 대체로 보아 그냥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시大統領은 레이건大統領에 비해 다소 덜 保守的이며 특히 對外政策에 있어 상당한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어 레이건 行政府에 비해 훨씬 세련된 對蘇政策의 구사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기본적 정책의 수정이나 변화는 없을 것이다. 中東 문제를 둘러싸고 강대국 간의 긴장된 관계가 때로는 국제정치를 위기의 상황으로 몰고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지역에서는 미·소 간의 군사균형이 대체로 유지되는 가운데 대결보다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및 교류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둘째 中蘇關係에 있어서는 앞서 지적한 대로 國家正常化의 단계에 공식적으로 돌입하였으며 두나라 사이의 무역량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밖의 분야에서의 경제협력도 심화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 화해와 경제교류협력의 증진이 바로 군사·외교의 영역에도 확산될 것 같지는 않다. 다시말해 中蘇관계가 정상화 되었다고해도 두나라가 군사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거나 동맹의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하며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 국가들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이 지속될 것이며 低級 次元이긴 하지만 군사기술 및 정보교환의 분야에서도 협력관계의 지속이 예상된다.

물론 중소관계의 개선은 한반도와 남북한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도 중소관계의 개선은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두나라의 不和를 이용

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취하는 漁夫之利의 현상을 상당히 소멸시킬 것이다. 중소가 북한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 양보를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두나라 모두가 북한에게 경제건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對南은건정책의 채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할 수 있다.

현재 북한은 경제사정이 대단히 나쁜 실정이며 필요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문호를 개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문호개방은 지난 40년 이상의 긴 세월동안 다져진 金日成 唯一體制에 엄청난 變革을 의미하게 될 것이다. 중국에서 8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精神汚染의 소용돌이가 훨씬 더한 위력으로 북한을 혼란의 渦中속에 휘몰아 넣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방의 속도와 범위를 엄격히 통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북한에는 金日成 死後지도층의 不安과 함께 開放과 改革의 압력으로 인한 政治的 變革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金日成 死後 지도층의 不安과 함께 開放과 改革의 압력으로 인한 政治的 變革의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북한의 南方政策이란 구체적으로 美·日에 대한 접근을 의미하며 이는 우리의 北方政策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강도가 더해질 것이다.

다만 우리의 北方政策에 대한 美國의 태도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것처럼 북한의 南方政策에 대해서도 中蘇의 입장이 같지 않을 수 있다. 다시 말해 美國이 우리와 중국의 접근은 환영하면서도 소련과의 交流에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처럼 북한과 미국의 접근에 대해서도 중국보다 소련이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현재 남북한 간에는 이미 경제격차가 4~5배 이상 벌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점차 심화되었으면 되었지 감소될 전망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등으로 남한이 북한에 비해 단연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늘어나는 남북한 간의 격차에서 생기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도 소련에 대한 군사적 위존도를 더욱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한의 對美·日 접근

은 당분간 북한사회를 외부에 개방하려는 성실한 자세보다 이를 대남전략에 이용하려는 전략적 측면이 강하게 내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의 추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소련의 평화공세가 경제협력의 증진과 군비축소라는 두 軸을 기초로 하여 점차 적극성을 띄우는 가운데 지금까지 미·소에 눌러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중국과 일본의 域內 強國으로서의 지위가 부상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北方政策 추진과 함께 중국과 소련의 한국접근의 폭이 커지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交叉接觸과 交流가 定型化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주변정세의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한 관계개선에 매우 긍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단기적으로 보면 한국의 국내 정치상황을 이용하려는 북한의 평화공세가 집요하게 계획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대처가 요망되는 것이다.